朴대통령 '협치' 첫 과제부터 스텝 꼬여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허용 안해
야권·호남 지역 중심 반발 움직임 일어

국가보훈처가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창도 허용하지 않기로 해 야권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훈처는 찬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제창 방식을 강요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훈·안보단체의 의견만 받아들인 셈이 돼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협치(協治)' 첫 과제부터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여야 3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이 문제와 관련,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기념곡 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창 방식이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러나 보훈처는 이날 결국 현행 합창단 합창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에서 기념곡을 지정한 전례가 없고, 애국가도 국가 기념곡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 제1호 기념곡'으로 선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노래 제창 역시 기념일 제목과 다른 제목의 노래는 합창단이 합창해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르게 하는 것이 정부의 관례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모든 참석자들이 의무적으로 따라 부르는 제창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르는 현행 합창단 합창 방식이 참석자들의 자율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이므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보훈·안보단체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 결과 기념곡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3.5%로 반대 29.4%보다 24.1% 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당장 반발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보훈처에서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야당과 한 약속을 3일 만에 찢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보훈처장 해임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 15일 일정

전라북도의회는 17일,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5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재만 의원이 송하진 도지사를 대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토로 한국중부발전(주) 석탄재 사용에 대한 전라북도 입장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과 이호근·강영수·한완수·최영일·이현숙·정호영·김현철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에는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의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3건의 조례안 등도 심의 처리된다.

세부일정으로는 18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를 실시한 뒤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전라북도 본예산은 5조 2,644억원이며 1차 추경예산은 2,625억원 등 총 5조 5,269억원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본예산 2조 7,062천원이고 추경예산은 883억원을 합해 모두 2조 7,945억원이다.

아울러 전북도 생활임금 조례안, 전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전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 폐지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등 총 23건(조례안 15, 동의안 3, 예산안 3, 건의안 1, 규칙안 1)의 의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에서 처리한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새누리당 친박계 당선인 20명 "혁신위장-비대위 인선 재검토를"

새누리당 친박계 20인은 16일 김용태 혁신위원장 선임 등 비박계가 혁신위와 비대위 전면에 포진한 데 대해 공개 반발하는 등 집단 시위에 나섰다.

박대출 김선동 의원 등 친박계 당선인 20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대책위원 및 혁신위원장 인선은 원점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후 위기를 극복해야 할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러나 이번 인선 발표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부합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인선 내용에 반발했다. 이들은 "내용은 급조됐고, 절차는 하자를 안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되기에는 미흡하다"며 "계파를 초월하라는 시대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물안 개구리식 인선으로는 우물안 개구리식 혁신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며 "진정 새누리당이 뼈를 깎는 혁신으로 국민 지지를 회복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 인선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비박계도 친박계도 아닌 외부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요구인 셈이다.

이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 유능한 분을 삼고초려라도 해서 모셔와 혁신을 주도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비상대책위원들도 유능한 인재로 채워야 한다"며 거듭 비박계 인사들의 퇴진을 촉구했다.

친박계 20인 기자회견에는 김선동 이헌승 윤재옥 이장우 이채익 박맹우 함진규 이우현 홍철호 김진태 김기선 박덕흠 김태흠 이완영 김석기 최교일 이만희 박대출 윤영석 박완수 의원 및 당선인이 참여했다. /이성주 기자

쌓여있는 법안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실에는 아직도 심사하지 못한 법안들이 쌓여있다.

우상호 "임행진곡 제창 불발시 정권 협조 안해"

박지원 "朴대통령 야당과 한 약속 3일만에 찢어버리는 것"… 보훈처장 해임건의안 제출할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만일 5·18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정권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만약 (제창이) 이뤄지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입장은 모르겠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관급 공무원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면으로 거역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관급 공직자가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할 수 있는가"라며 "이 문제 대해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문제를 넘어 정권 차원의 해괴한 일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5·18기념식까지 정 원내대표도 한 번 더 권고한다고 하니, 이틀 간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저희(야당 원내대표)에게 얘기하고 보훈처에서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야당과 한 약속을 3일 만에 찢어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 13일 최고위에서 "박 처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에 대해 '자기 선을 넘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미 우리는 레드카드를 보냈기 때문에 퇴장할 때가 됐다"고 박 처장의 퇴진을 압박한 바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대통령에게 재고를 촉구하면서 3당 공동으로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김종인 "임행진곡 제창쪽으로 가야 좋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불발에 "제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3당 원내대표들이 얘기할 때 (박 대통령이)그것을 지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가)보훈처장이 말을 안 듣는 모양"이라며 "원내대표들끼리 이야기했으니 원내대표들끼리 알아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이크를 넘겨받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국가보훈처를 겨냥한 공세를 폈다.

당 관계자는 "비대위 사전 회의에서 조정했다"며 "우 원내대표가 김 대표에게 '청와대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박 대통령과 합의한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사자인 내가 직접 말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주 기자

정운천 새누리당 중앙당 비대위 포함

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 당선인(전주 을)이 중앙당 비상대책위원에 포함되면서 전북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비대위 상견례 자리에 참석한 정 위원은 "과거 목민관들은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함거에 들어가 자신의 책임을 속죄했다"면서 "함거에 들어가는 목민관의 심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과제를 시행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당선인은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탄소법 국회통과, 새만금 수목원 국비지원, 전북 동부권 힐링거점사업 지원 등 전북현안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광영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혁신위원장 "청와대 개편, 국민에 대한 답 아냐"

김용태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답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비대위 상견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떠난 분들, 떠나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야 하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다"며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인정하기 싫은 걸 인정해야지만 그게 혁신의 출발"이라며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다. 이걸 인정하기 싫다고 인정 안 하면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없던 것처럼 그냥 막 지나갈 순 없는 듯"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 인선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마무리지을 것"이라며 "외부인사를 대부분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임행진곡' 보훈처 결정 논란, 정치권 넘어 각계로 불붙어

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제창해야"… 보수 시민단체들 "기념곡 지정은 시대착오적"

5·18민주화운동기념일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 결정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노동계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16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오는 18일 기념식에서 합창단이 합창하고 원하는 사람은 따라 부르는 현행 '합창' 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진보, 보수로 갈려 찬반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전 논평을 내어 "민주주의 역사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6년 전 5·18광주민주항쟁은 한국현대사에서 자랑스럽게 기억되고 계승돼야할 역사이고 오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출발점"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광주항쟁이 국가적인 민중항쟁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는 건 보훈처의 과잉 행정처분이 아닌가 싶다"며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곡"이라며 "그걸 기념곡으로 다같이 행사에서 제창하는 걸 인정하지 못 하는 것이야말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다면 제창곡, 기념곡으로 해야한다"며 "일부 국민의 반대 여론은 변명,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을 띤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은 달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해와 같은,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고육지책"이라며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옥남 정치실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이나 쟁점들에 대해 정확하게 규명된 게 없다"며 "곡이 사용됐던 용도나 의미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곡 자체가 논란의 한 가운데 있지 않나"라며 "최소한 국가기념곡으로 지정하려면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등의 합의가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국통일네트워크와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15개 단체가 모인 광주5·18진상규명국민모임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중의례에서 애국가 대신 부르는 민중가요였다"며 "국론 분열 방지책으로 5·18기념곡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밝혔다.

애국단체총협의회의 경우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와 운동권만의 기념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애국적인 5.18기념곡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안진수 기자

심상정, 가습기특별법·청문회 주장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6일 "국회는 조속히 가습기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민생 현안이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대국회 개원과 함께 가습기 특별법이 통과되고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여야4당의 논의를 즉각 시작해주시길 바란다"며 "전경련 등 재계의 반발로 후퇴한 화평법을 화학물질생산자와 사용자간의 정보 교환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해야 한다. 살충제와 같은 생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선진국형 화학물질관리제도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희생자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전·현직 정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 박 대통령은 정부의 과오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희생자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심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불발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3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총선 민심을 받드는 것처럼 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민심을 배반했다. 결국 3당 원내대표 회동은 박대통령이 민의를 피해가기 위해 벌인 가면극에 불과했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제창 여부는 정부가 총선 민심을 받들지 말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